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

We Crashed 6

우리 기후·환경은 폭망했다

민주연구원
The Institute for Democra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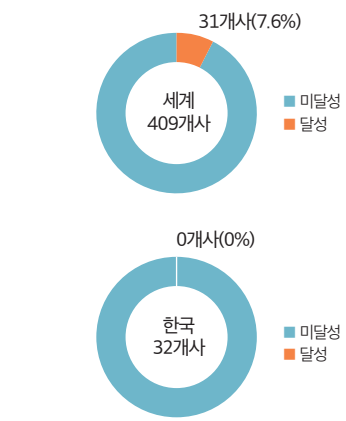
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

RE100(재생에너지 100%) 폭망

"재생에너지 없어 RE100 달성 어렵다"
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후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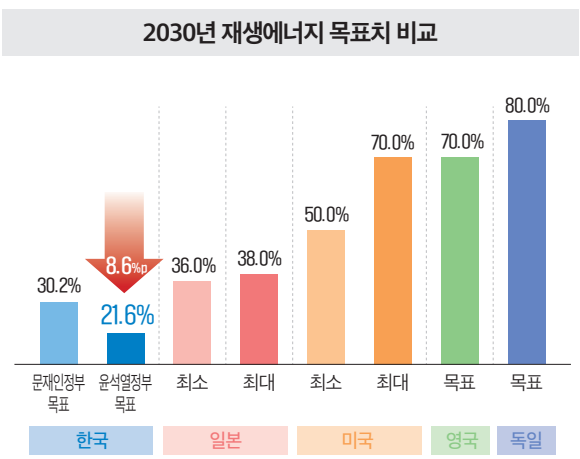
- RE100* 가입 세계 409개사 중 31개사 달성 : 구글('17년), 애플('18년) 등
  * 기업사용 전력량을 100% 재생에너지(Renewable Energy)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
- RE100 가입 국내 32개사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매우 저조
  : LG에너지솔루션 44%, 아모레퍼시픽 18% , SK하이닉스 4%, SK 3% 등
-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
  : OECD 평균(23.4%), 한국(3.4%)의 7배 수준*
  * 통계청 「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 이행현황 2023」('23.3.29)
- 윤석열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크게 후퇴(30.2%→21.6%)*
  * 산업부 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」('23.1.12)

RE100 달성 0%인데



자료 : 한국ESG연구소

재생에너지(RE) 목표는 낮추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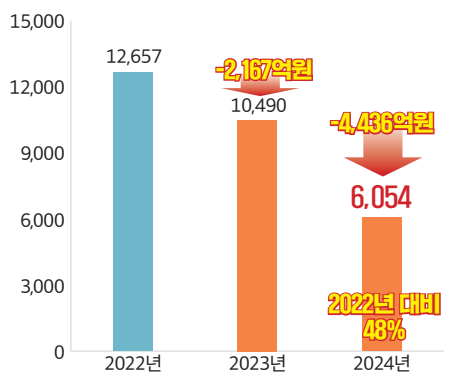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환경연구원

재생에너지 예산 폭망

"尹정부, 태양광사업 싹 뒤져보는데"
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만에 반토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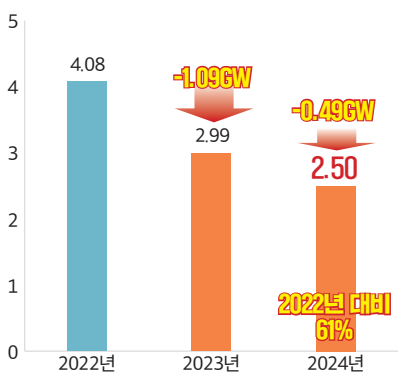
- 재생에너지 예산 2년 연속 삭감
  : ('22년) 1.3조원 → ('23년) 1.0조원 → ('24년) 0.6조원
- 태양광 신규발전소 설치 용량 축소
  : ('21년) 4.08GW → ('22년) 2.99GW → ('23년) 2.50GW
-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 제한
- 국내 태양광 기업 내수 매출 급감('22.상반기→'23.상반기)
  : **한화큐셀 -57%**(2,838→1,227억원), **신성이엔지 -45%**(573→318억원)

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(억원)



자료 : 기획재정부

태양광 신규발전소 설치 용량 (GW)



자료 :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수출입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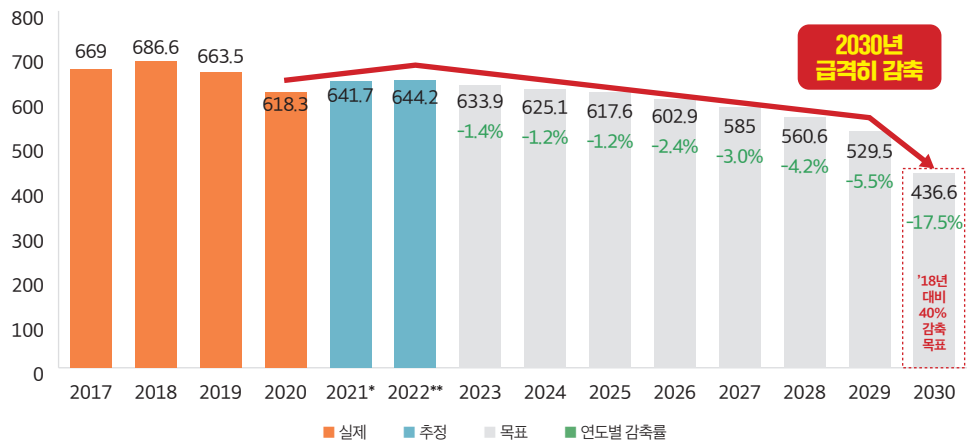
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

탄소감축 폭망

"내 임기만 아니면 돼"
온실가스 감축에 정부 무책임

-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2030년 탄소감축 40% 목표 세부안 발표
  : 산업부문 부담은 낮추고(14.5%→11.4%), 전환부문은 높이고(44.4%→45.9%)
- 윤석열정부에서는 조금씩 감축하면서, 다음 정부에서 급격히 감축?
  : 2030년 40% 감축 목표량 중 절반에 가까운 17.5%(추정)를 해당연도에 달성
- IPCC(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)가 강조한 선형적 감축 대비,
  한국은 7년간 무려 3억 930만톤을 더 배출하는 꼴

온실가스 순배출량 (백만톤CO2eq)



주 : * 2021년은 환경부 잠정 총배출량에 2020년 흡수량 적용
** 2022년은 국회예산정책처 배출 전망에 2020년 흡수량 적용
자료 : 온실가스정보센터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가공 JTBC 보도자료(2023.4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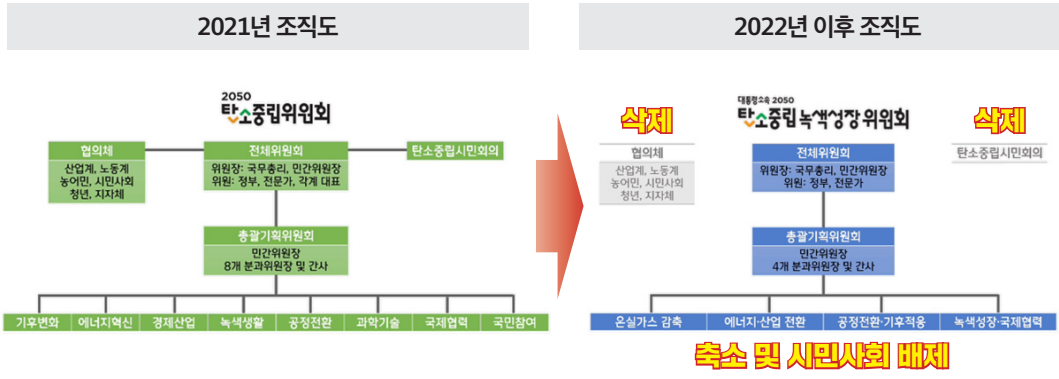
기후정의 폭망

"탄소중립기본법 위반!"
기업 민원 창구로 전락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- 1기 탄소중립위원회('21.6월) : ❶8개 분과 ❷70여명 민간위원 ❸학계·시민단체·청년·종교계·농어민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
-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'22.10월) : ❶분과 4개로 축소 ❷민간위원 대폭 축소(72명→32명) ❸아동·청년·노동계·농민 배제 ❹전문가·기업·대형기관으로만 구성
- 아동·청년·노동계·농민 및 미래세대 등 민간위원 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위반* 가능성

  *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15조⑤ : "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상공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"

윤석열정부 시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축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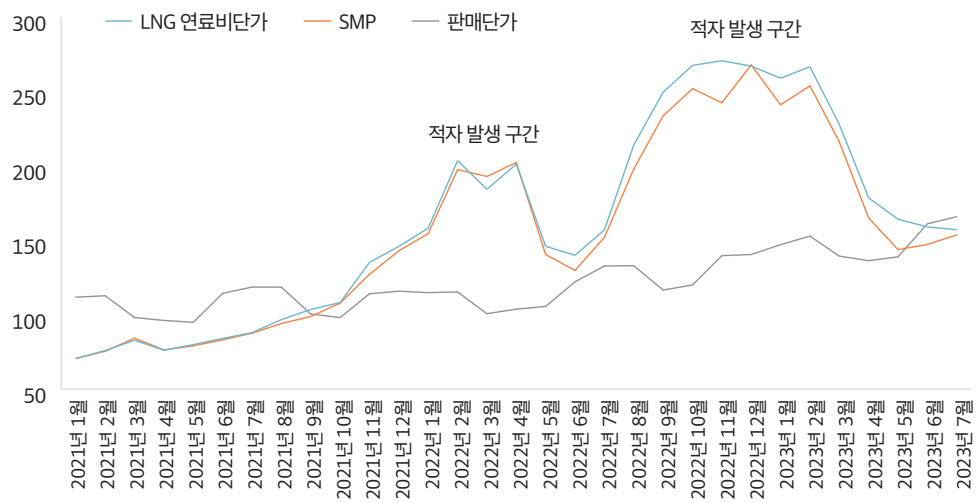
자료 :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한전적자 폭증

"한전 적자 탈원전 탓? 문제는 에너지가격 급등"
한전 적자가 탄소중립 계획에 걸림돌 될 것 예견 다수

- 한전 적자 핵심 원인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
- 한전 누적적자 : ('21~'22년) 39조원 → ('23.2분기) 47조원
  한전 총부채 : ('21년) 137조원 → ('22년) 193조원 → ('23.상반기) 201조원
  - 美 JP모건 :
    "한전 탄소중립 환영 … 다만 이를 위한 한전 자금조달 여력은 우려 요인"
  - 英 파이낸셜타임스(FT) :
    "한전 적자는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발을 동동거릴 수 밖에 없는 원인이자 결과"

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→ 한전 적자 (원/kWh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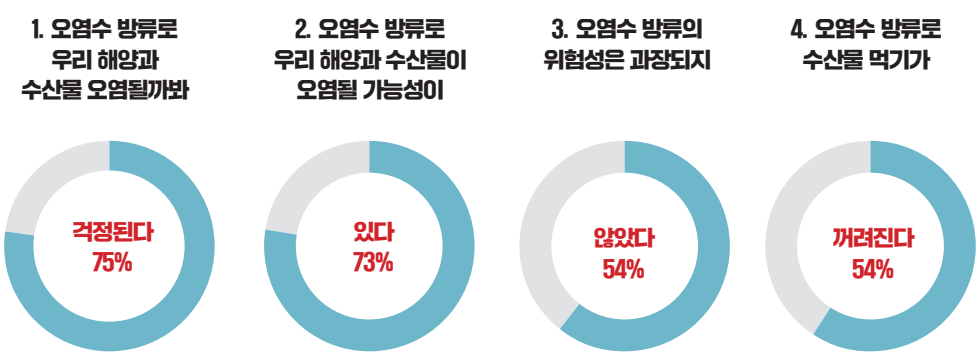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전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

해양주권 절망 ❶ : 방사능 절망

"방사능은 안전치가 없다"
국민 대다수 피해와 오염 걱정, 대통령은 괴담 취급

- 대다수 국민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걱정, 尹정부는 괴담 취급
  - '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' 홍보물 KTX 비치
- 전체 오염수의 0.5% 방류에도 바다는 이미 변화
  - 아직 방사능 중단 총기준치(700Bq/ℓ) 미만이나, 10Bq/ℓ 일부 검출
- 美 국립학술원 :
  "안전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능 위험이 제로가 아니라,
  방사능 위험은 방사능 노출량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며
  방사능은 안전치(역치)가 없다"
- 방사능 누적으로 인한 해양생물 오염이 문제
  : 기준치 180배 '세슘 우럭'이나 '방사능 쥐노래미'가 후쿠시마 해안에서 포획

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



자료 : 한국갤럽(2023.9.1)

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

해양주권 절망 ❷ : 오락가락 여당대표

"핵오염수 투기 반대,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?"
김기현 당대표, 日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서명

-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바꾸기
  - 2020년 10월 : "현재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.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" (국회 외통위 국정감사)
  - 2021년 4월 : 「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」 서명
  - 2023년 9월 : "오염수 가짜뉴스 판치는데 … 아무도 책임 안져"
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,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 공동발의

일본 정부의 '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'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

의 안 번 호	9796

발의연월일 : 2021. 4. 29.

발 의 자 : 조태용·강대식·김기현
김석기·김성원·김태호
박대수·박 진·이태규
전봉민·정진석·정찬민
지성호·최형두·태영호
한무경 의원(16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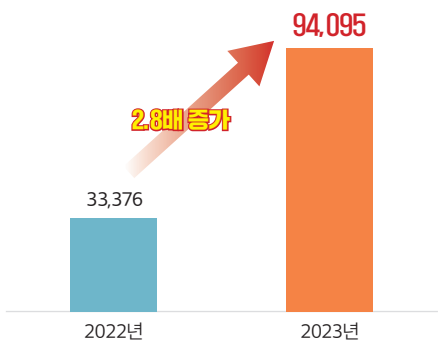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

수질관리 폭망

"같은 통계가 4개월 만에 28.7배 증가한다고?"
역대 최악 녹조, 수질관리 비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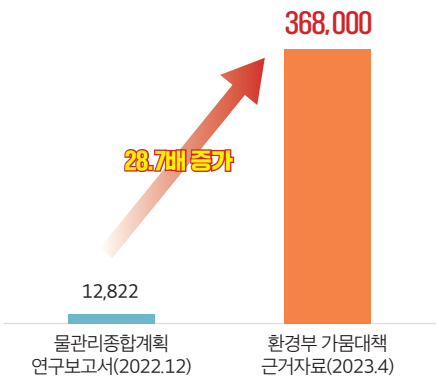
- 낙동강 수질 비상 : 강물의 정체시간과 밀접한 유해 남조류 수가 전년 대비 2.8배 이상 증가
  마이크로시스틴 등 정수과정에서 독성 강화 가능성
- 영산강·섬진강 최대 생활·공업용수 부족량 통계, 4개월 만에 28.7배 증가
  : 尹정부, 댐 증설 필요성 근거로 '생활·공업용수 부족량' 통계치 부풀리기
- 윤석열정부는 4대강 보 유지 및 댐 증설에만 관심

낙동강 상류 녹조 몸살 (개체수/㎖)



주 : 안동댐 예안교 유해 남조류 세포수
자료 : 안동시청

정부인용 생활·공업용수 부족량 통계 (톤/일)



주 : 영산강·섬진강 과거 최대 부족량 기준
자료 : 환경부, 국가물관리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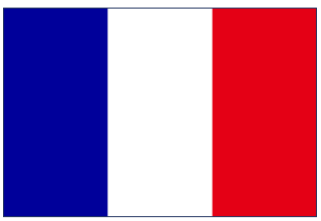
환경부 폭망

"환경부는 환경오염관망부인가?"
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스스로 폐기

- 일회용컵 보증금제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
  - 감사원 : "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"
    vs 정부 : '일회용컵 보증금제'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, 자원순환 정책 퇴보
- 독일은 2003년부터 일회용기 보증금제(Pfand) 시행, 빈 용기 회수율 98% 달성
-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"자연성 회복" 삭제
  : 2010년 이후 일관된 하천관리 패러다임 '자연성 회복' 폐기

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

한국
일회용컵 보증금제
전면 시행 유보



프랑스
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접시
및 수저 사용 전면금지

독일
2003년부터
일회용기 보증금제 시행